“무안공항, 명실상부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100일 성과·정책방향 제시

“호남고속철 2단계 계획보다 2년 빠른 2023년 개통”

군공항 이전·대변 역할 강조…남북교류협력 주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무안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7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어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을 통합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2021년 이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통합을 추진하고 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주로연장·컨베이어벨트 확장, 국제선 확충을 추진하겠다”며 “무안공항 활성화 필수요소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3년에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항공정비 산업 등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남해안 철도사업도 총사업비 변경을 통한 전철화사업을 동시 추진해 202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 같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 무안공항은 충남, 전북과 남해안 지역까지 이용권역이 확대돼 서남권 허브공항으로 위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이 수용해야 하는데 이는 일방적으로 국방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전남이 마냥 반대만 해서도 안된다”며 “전남도가 기관 간 조정 역할과 지역주민의 대변 역할을 한다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군공항의 전남지역 이전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지역주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 등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광역자치단체로 남북교류협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역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시군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전남평화재단을 설립하고 남북협력기금도 34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7기 도지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7기 도정 역점 시책을 발표한 뒤 실국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2009년 이후 중단된 평양빵 2공장 건립을 재개하고 국도1호선의 양 끝점인 목포-신의주 간 남북평화 스포츠 교류, 녹십자 등을 통한 약품 지원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공대의 위치에 대해서는 “혁신도시와 대학이 함께 연계해 기능할 수 있는 대학설립 예정지는 전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지사는 취임 100일 주요성과로 일자리 인구감소 대응 첫 조직개편·84개 기업 3조7,000억원규모 투자협약·내년도 국고예산 6조원대 돌파 등을 꼽았다.

또 조선산업 위기 극복·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선도투자 확정·광주전남 상생발전 선도·현장소통강화 등도 성과로 내놓았다.

김 지사는 향후 10대 역점 추진 시책으로 ▲체감형 도민 행복시책 실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일자리 12만개 창출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 조성 ▲차세대 신성장 산업 육성 ▲융복합형 관광산업 육성 ▲친환경 스마트 농축어업 혁신모델 개발 ▲핵심 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지역개발 추진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 및 도민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3개월 간 수차례 검토와 자문을 거쳐 수립한 7개 분야 139건의 공약이행 계획은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유념해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새로운 정도천년 기회와 대도약의 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동열 감독 “오지환 선발 청탁 없었다”

국정감사서 “대표팀 선발과정 소신껏 선수 선발”

선동열 대한민국 야구대표팀 감독이 10일 국정감사장에서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없었으며 병역 미필 여부가 선수 선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 감독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참석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을 설명하며 이처럼 해명했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대표를 선발했다는 지적을 받는 야구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경찰야구단과 상무에서 대체복무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국가대표에 승선,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특례를 받게 된 오지환(LG 트윈스)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그라운드에 계셔야 할 분이 국감장에 오신 게 야구팬 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프로야구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본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선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청탁이 있었느냐?”, “실력이 비슷한 경우 병역 미필 여부가 영향을 주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선 감독은 “시대적 흐름을 헤아리지 못한 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그러나 선수 선발은 제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도 선수 선발에 청탁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던 선 감독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야구 감독으로 이곳까지 온 것에 한 말씀 부탁한다”고 말하자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금까지 운동만 했었지만, 행정이나 사회는 진짜 몰랐다”며 “모든 걸 몰랐던 걸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선수 선발 과정에서) 국민께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이개호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검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최대 1년 이행기간 부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쌀 목표가격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차기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행 법령에 따라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처리가 늦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또 “쌀 목표가격 변경과 병행해 농업인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과 관련해 “지난해 기금 조성액은 309억6,000만 원으로 목표액인 1,000억 원에 미달했고, 올해도 10월 현재까지 166억5,000만 원이 출연돼 여전히 부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상생기금에 출연하는 민간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기금 조성액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접수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필요 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행계획서를 평가할 때는 지자체 TF에 축산농가 대표를 참여토록 하고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 지역상담반 등을 활용해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가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 제도와 관련해 “지난 8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등록 농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식재된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가 브리핑

황주홍, 문재인 정부 농어업예산 홀대 질타

민주평화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농식품부 국정감사 첫날,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 예산홀대를 강하게 질타했다.

10일 황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과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의 격차(%p)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p 수준을 유지하던 국가·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 격차는 2018년 7.0%p, 2019년 8.6%p로 급증했다. 실제 2017년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3.7% 늘어난 400조 5,000억원이며,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 대비 1.2% 늘어난 1,962억원으로 증가율 격차는 2.5%p였다.

그러나 2018년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7.1% 늘어난 428조원, 농식품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0.1% 늘어난 1,972억 원으로 격차는 7.0%p로 늘어났다.

황주홍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문재인 정부 농정(農政)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11월 예정된 예산심사를 대비해 농어업 예산 증액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인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정부 나서야”

민주평화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의원은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는 정권 차원에서 결단만 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김부겸 행장안전부 장관에게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정리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어 특별법은 타 사건에 입법선례가 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제기하며 제정에 반대한다면, 입법을 통한 여순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은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문재인 정권이 여순사건에 대한 해결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입법의 호기를 맞아 정부의 특별법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2차 북미회담 내달 6일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이하 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 정상회담 의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에 길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 주에서 열리는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에어포스원을 타고 가는 도중 기자들에게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언급,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로 시기를 못 박음에 따라, 북미 양측은 일단 ‘연내 개최’를 시야에 두고 의제와 일정·장소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후’로 일찌감치 못 박은 데는 우선 중간선거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외교사안이 미 중간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고려해 일단 북미정상회담을 선거 이후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전 행정부가 이루지 못했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진행된다면 트럼프 미 행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다른 각도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이후 북미정상회담 개최’ 천명은 시간에 쫓겨 ‘졸속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